

독 일

2024년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4]

2024. 5.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본 보고서는 2023년 4월 24일에 독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2024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4) 보고서를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 김빛마로 재정지출분석센터장
배진수 재정제도분석팀장

공동연구원 | 염보라 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1	경제 전망	1
2	재정 전망	3
3	주요 재정정책	6
	가. 재정정책 방향	6
	나. 수입 및 지출 관련 재정정책	7
	다. EU의 국가별 재정정책 권고 이행	11
4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12

요 약 SUMMARY

- 독일 정부는 2024년 4월 24일에 2024년 안정화 프로그램(*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4*) 보고서¹⁾을 발표

※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매년 4월에 유로 지역 EU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에 경제·재정전망, 중기재정목표(MTO), 주요 재정정책 설명 등을 포함한 ‘안정화 프로그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경제 전망) 독일의 실질 GDP는 2024년 0.2%, 2025년 1.0% 증가할 전망
 - 2024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8%까지 하락하고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
- (재정 전망) 2024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에너지 위기 대응 관련 임시 조치의 만료로 전년 대비 개선된 1.5%를 기록할 전망(2023년 2.5%)
 - GDP 대비 구조적 재정적자는 2024년 1.25%, 2025년에 0.75%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2026~2027년 사회보장기금에 따른 악화로 중기재정목표(MTO) 달성이 어려울 전망
 -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24년 64%에서 2028년 62%까지 점차 감소할 전망
- (재정정책) 재정정책의 정상화,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 미래 대비를 위한 높은 투자 지출 유지를 목표로 종합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공급 측면의 정책 추진
 -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 2025년부터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지출을 축소하고, 지출 우선순위 설정 및 공공 지출의 효율성 향상, 2027년까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 준칙 준수 노력 등의 조치 시행
 - (잠재 성장력 향상을 위한 공급 측면 정책) 민간투자 활성화 및 재정동원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 관료주의 개선, 공공행정 현대화, 혁신 친화적인 여건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구조개혁 추진

1) 독일 연방 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4 zeigt erste Erfolge der Konsolidierung - weitere Maßnahmen bleiben erforderlich” 보도자료, 2024.4.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4/04/2024-04-24-deutsches-stabilitaetsprogramm-2024.html>, 검색일자: 2024.4.25.
독일 연방 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4*, 20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stabilitaetsprogramm-2024.pdf?__blob=publicationFile&v=9, 검색일자: 2024.4.25.

1 | 경제 전망

» (단기) 독일 정부는 ‘2024 연간 경제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24)’ 전망에서 2024년 독일의 실질 GDP가 0.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GDP) 정치적 불확실성은 2024년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경제지표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
 - 2024년 초반에는 전반적인 경기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약하겠지만 높은 소비자물가와 그에 따른 구매력 하락 등 지난해 경기에 영향을 미쳤던 부정적 요인들이 서서히 감소
 - 2024년 독일 경제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회복할 전망
- (물가) 2024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8%까지 하락하고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보다 약간 낮을 전망(2023년 5.9%)
 - 가스 및 지역난방에 대한 임시 부가세율 인하가 4월 만료되고, 49유로티켓(Deutschlandticket) 도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완화효과가 감소
- (노동시장) 2024년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2025년 독일의 실업률 감소하고 취업자 수는 2024년과 2025년에 계속 증가할 전망
 - 2023년 취업자 수는 약 4,600만명으로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증가추세는 점차 둔화할 전망

» (중기) 연방정부는 독일의 실질 GDP 성장률을 2024년 0.2%, 2025년 1.0%로 전망하고 2026~2028년 사이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0.7%로 가정

- 2026년~2028년 연평균 잠재 생산량 증가율은 0.5%로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한 숙련된 노동력 감소를 반영
 -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력의 기여도는 감소하겠으나 자본과 생산성의 기여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약간 증가할 전망
 - 숙련 이민자 증가, 여성, 노인, 실업자, 이민자의 노동 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독일 중기 성장 전망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표 1 〉 독일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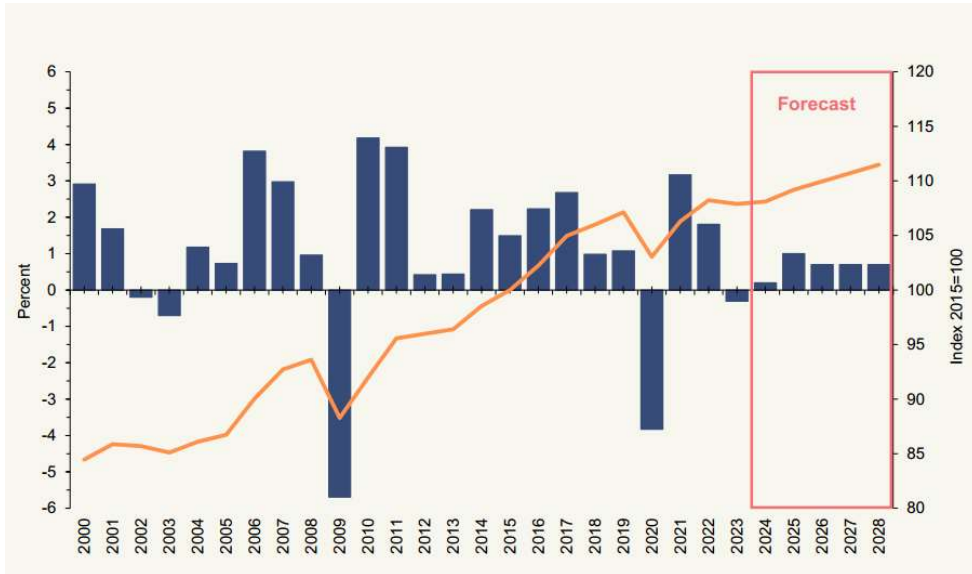
(단위: 전년 대비 % 변화,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실질 GDP 성장률	-0.3	0.2	1.0	0.7	0.7	0.7
민간소비	6.3	2.8	1.8	2.0	2.0	2.0
정부소비	6.0	4.7	2.2	2.6	2.6	2.6
총고정자본형성	2.7	2.75	3	3	3	2.75
수출	0.6	1.1	1.3	0.7	0.7	0.7
수입	-3.4	0.9	1.7	0.7	0.7	0.7
GDP 디플레이터	6.6	3.2	1.8	2.0	2.0	2.0
취업자수	0.7	0.2	0.2	-0.2	-0.2	-0.2
실업률(% , ILO 기준)	2.8	2.9	2.7	3.0	3.2	3.3

출처: 독일 연방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4*, 2024, p.56, Table 9; p.57, Table 10; p.57, Table 11.

〈 그림 1 〉 독일의 실질GDP 추이

(단위: %, 2015년=100 기준 지수)



주: 막대 그래프(좌축)는 전년 대비 증감률(%), 꺾은선 그래프(우축)는 GDP 연쇄지수
출처: 독일 연방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4*, 2024, p.11, Figure 1.

2 | 재정 전망2)

» (수입) GDP 대비 수입 비율은 2023년에 46.1%에서 2024년 47%까지 증가하고 이후 전망 기간에도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

- 독일대학의 등록금인 사회 분담금(Sozialbeitrag) 비율이 상승하고 기타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탄소 가격 인상 및 부가세 일시 인하 폐지에 따라 GDP 대비 수입에서의 세금 비율이 증가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시행했던 천연가스 부가세율 인하 조치 종료(19%→7%)
- 또한 2024년부터 연방정부 부문으로 이전되는 지방 대중교통에 대한 수익이 정부 수입 증가에 기여할 전망

» (지출) GDP 대비 지출 비율은 2023년에 48.6%에서 2024년 48.75%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지출 비율은 계속 증가추세

- 2024년부터 지방 대중교통의 연방정부 부문 이전에 따른 통계적 특수효과와 독일연방군 특별 기금, 기후변화기금, 사회보장기금의 증가가 주로 지출 상승을 주도
 - 인플레이션 보상법의 규모가 2023년 190억 유로에서 2024년 320억유로로 증가
 - ESA(European System of Accounts) 기준 연방정부의 총 고정 자본 형성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명목 잠재 GDP 성장률 평균(2.7%)보다 높은 수준
- 2024년 총 정부투자 지출은 530억 유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녹색 및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와 같은 우선순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예정
- 2023년 GDP의 대비 이자지출은 0.9%였으나 금리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8년에는 1.25%를 기록할 전망
- 2024년 'EU 평가 기준 재정지출(expenditure benchmark definition)³⁾'의 증가율은 3.75%로 전망되며, 지방 대중교통의 정부부문 이전에 따른 통계적 특수효과가 지출증가에 기여
 - 하지만 이후 대부분의 전망기간 동안 EU 평가기준 평균 지출 증가율은 명목 잠재 GDP 성장률 평균(2.7%)보다 낮을 전망

2) 이번 안정화 프로그램의 재정전망은 연방 정부의 2024년 연방예산(2024.2.12.) 연방 재정계획(2023.7.5.), 세수추계(2023.10.25. 기준) 업데이트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함

3) 이자지출, 노동시장의 경기변동 영향, 평균 지출 수준 대비 투자 지출의 변동, EU 프로그램 조달 지출, 수입 관련 재정적 조치의 영향 등을 조정한 지출을 의미. 동 지출의 증가율을 지출 기준치(중장기 잠재성장률)와 비교하여 평가

» (일반정부 재정적자) 2024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전년(2.5%) 대비 개선된 1.5%, 2025년에는 1.0%를 기록할 전망

- 에너지 위기 대응 관련 임시조치의 만료가 재정적자 개선에 기여하였으나, 기후변화기금과 독일연방군 특별기금의 적자 증가로 일반정부 적자개선은 둔화할 전망
- 중기적으로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1.0%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 및 2027년의 재정적자 증가는 주로 사회보장기금 증가에 기인

» (구조적 재정적자) GDP 대비 구조적 재정적자는 2023년에 2.0%에서 2024년 1.25%, 2025년 0.75%로 개선될 전망

- 2026년과 2027년에는 사회보장기금에 따른 약간의 구조적 악화가 예상되며, 2028년까지 중기목표(MTO)인 0.5%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 (일반정부 채무)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23년에 63.6%에서 2024년 64%로 소폭 상승 후, 2028년까지 62%로 점차 감소할 전망

-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21년 69.3%로 최고치에 이르렀으나, 높은 명목 GDP 성장으로 2022년 66.3%, 2023년 63.6%까지 감소
- 2025년부터 GDP 대비 채무비율이 다시 하락하여 2028년 말에는 약 62%에 이를 전망

〈 표 2 〉 독일 재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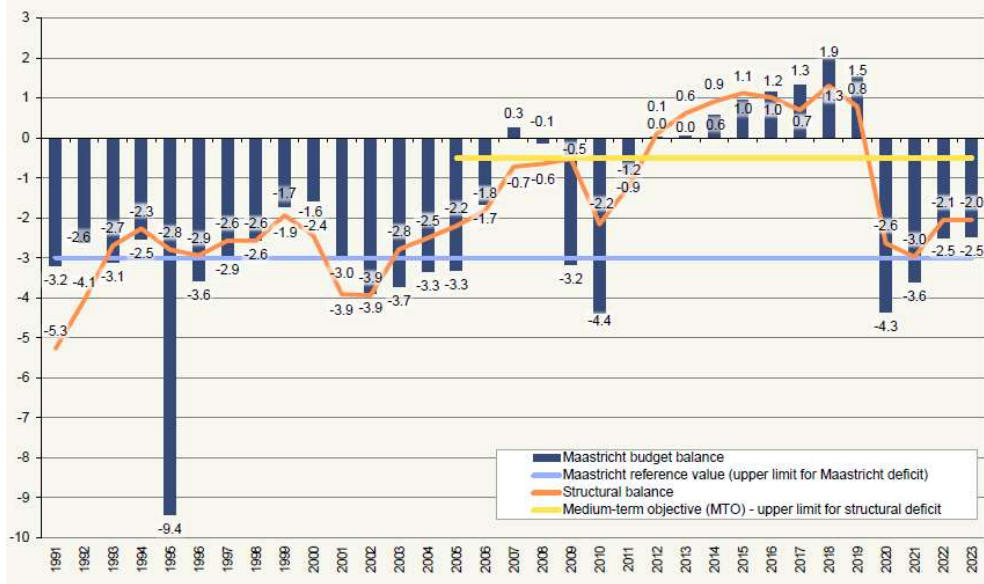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일반정부 총수입	46.1	47	47.5	48	48	48.5
일반정부 총지출	48.6	48.75	48.75	49.25	49.5	49.5
일반정부 재정수지	-2.5	-1.75	-1	-1.25	-1.5	-1
중앙정부	-2.3	-1.25	-0.75	-0.75	-0.5	-0.5
주정부	-0.2	-0.25	-0.25	-0.25	-0.25	0
지방자치단체	-0.3	-0.25	-0.25	-0.25	-0.25	-0.25
사회보장기금	0.2	0	0	-0.25	-0.5	-0.25
일반정부 기초 재정수지	-2.5	-1.75	-1	-1.25	-1.5	-1
이자지출	0.9	1	1	1	1.25	1.25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	-2.0	-1.25	-0.75	-1	-1.25	-1
일반정부 채무	63.6	64	63.25	63.25	63	62

출처: 독일 연방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4*, 2024, p.39, Table 5; p.41, Table 8; p.55, Table 13.

〈 그림 3 〉 독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구조적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주: 1.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재정적자의 기준 한도는 GDP의 3%
 2. 중기재정목표(MTO)는 국가별로 사전에 설정
 출처: 독일 연방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4*, 2024, p.13, Figure 3.

3 | 주요 재정정책

가 재정정책 방향

» 독일은 재정정책의 정상화,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 미래 대비를 위한 높은 투자 지출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공급 측면의 정책이 필요

- 독일의 재정정책 전략목표는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과 중기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공급 측면 정책 추진
 -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 2025년부터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지출을 축소하고, 지출 우선순위 설정 및 공공 지출의 효율성을 향상, 2027년까지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준수 노력 등의 조치 시행
 - ◆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한 지출 요구 증가,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에 대한 대응 필요성 등 공공예산 및 채무 비용 증가에 직면하여 독일의 재정 여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차입한도 및 재정준칙 준수를 통한 GDP 대비 채무비율 감소 노력
 - ◆ 기록적인 수준의 공공투자를 통해 공공 인프라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후 중립 경제로의 전환, 인구통계학적 변화 대응, 독일 경제의 현대화(디지털화)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 (잠재성장력 향상을 위한 공급 측면 정책) 총 공급 확대와 생산성 증가를 통한 경제모멘텀 강화를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 및 재정동원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 관료주의 개선, 공공행정 현대화, 혁신 친화적인 여건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구조개혁을 추진
 - ◆ 성장기회법(Growth Opportunities Act)⁴⁾은 투자와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창출, 단순화된 조세시스템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금융법(Future Financing Act)⁵⁾은 민간 자본의 가용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기업의 고성장 여건을 강화
 - ◆ 기업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육과 훈련을 통한 고숙련 노동자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교육 및 평생학습법(Aus-und Weiterbildungsgesetz)과 기술이민에 관한 법률(Gesetz zur Weiterentwicklung der Fachkräfteeinwanderung)을 채택
- 독일의 재정정책은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위기에서 강력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글로벌 가치 창출을 위한 탄력적인 구조로의 변화를 촉진
 - 연구 개발에 자금 지원, 데이터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목표에 맞게 인공지능, 양자 기술,

4) 4년에 걸쳐 법인세를 320억유로(약 45조9000억원)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금감면법

5) 시장을 디지털화, 규제 관료주의 축소, 연방 금융 감독 기관과의 문서 및 의사소통에 영어 사용을 허용하는 조치 등이 포함

나 수입 및 지출 관련 재정정책

» (에너지 위기 안정화 및 지원) 에너지 도매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계와 기업은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부담을 겪었으며, 경제안정화기금, 구호패키지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 2022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시행된 구호패키지는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 조치, 취약 계층과 타격을 입은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 가스, 난방 및 전기에 대한 가격 인하 등이 포함
 - 독일과 유럽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 정부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가스 수입업체 등에 유동성 지원과 대출 제공
 - 천연가스에 대한 부가세율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19%에서 7%로 인하
- 2024년 인플레이션 보상법의 구제액은 2023년 대비 약 130억유로 증가한 총 320억유로로 실질소득의 증가없이 발생하는 소득세 부담을 경감

» (에너지 공급) 정부는 에너지 공급 정책을 통해 에너지 공급 안보 보장 및 에너지원 다양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 에너지 전환 촉진 노력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법(Erneuerbare-Energien-Gesetz), 육상풍력법(Wind-an-Land-Gesetz), 해상풍력법(Wind-auf-See-Gesetz) 개정 등의 조치 시행
 - 2023 재생에너지원법에 따라 계획 및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고 자금 조달 효율과 입찰 규모를 높이는 조치가 포함됨
- 높은 수준의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가격패키지, 발전소 전략, 배전망개발계획 2037/2045 등을 시행
 - 제조업, 농업, 임업에서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배전망개발계획에 따라 배전망 확대조치 시행
 - 발전소 전략에는 최대 4개의 2.5GW 규모의 수소가스 발전소(H2-ready gas-fired power plants)설립이 포함되며, 수소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은 2032년 발표예정

» (기후변화 대응) 2045년까지 순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시행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도입으로 탄소집약산업에 대한 허용은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탄소가격제에 따른 수익은 기후변화기금에 할당되어 에너지 전환과 기후행동을 위한 사용

- 태양광 발전 시설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관료적인 절차를 줄이기 위해 태양광 패키지를 채택하고, 건물에너지법(Gebäudeenergiegesetz) 및 열 계획법(Wärmeplanungsgesetz) 개정안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재생에너지가 사용되는 전력의 최소 65%를 차지해야하며, 화석연료난방시스템은 기후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해야한다는 것이 개정된 법의 핵심내용

» (공공 투자) 2024년 연방예산에서는 기후중립, 디지털화, 공공 재정 통합 및 투자 균형을 위해 705억유로 규모의 투자지출을 계획

- 투자 규모는 위기 이전인 2019년 381억유로 대비 1.8배 증가하였으며, 491억유로에 달하는 투자금이 기후변화기금에 배정
 - 예산법에 따라 "세대 자본 기금"에 대한 대출 120억 유로와 Deutsche Bahn AG에 대한 추가 자본 55억 유로는 투자로 분류
- 일반정부의 총 고정자본 형성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4.5%, 평균 명목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7% 증가할 전망

» (고용) 정부는 노동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용친화적정책을 추진

-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에서 12.41유로로 인상하고 최저 소득한도를 538유로로 인상하는 등 노동시장 참여 확대 노력
- 시민수당법(Bürgergeld-Gesetz)⁶⁾의 표준 혜택 요율은 물가상승을 반영을 통한 조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급여율이 약 12% 증가
- 노동인구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연방정부는 직업교육 및 훈련에 대한 목표 인센티브를 만들고 국가 기술 전략(National Skills Strategy)을 지속적으로 개발
 - 실업자와 저숙련 근로자가 계속해서 직업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구조적 변화에 따른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직업교육 및 훈련을 강화
- 숙련노동전략과 숙련이민발전법(SkilledLabour Strategy and the Act on the Further Development of Skilled Immigration)을 마련하고 2024년 6월 1일까지 3단계에 걸쳐 발효할 예정
 -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은 독일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노동 시장과 사회법 제2권(Sozialgesetzbuch II)에 따른 모든 고용 촉진 조치에 대한 권리를 갖을 수 있으며, 일자리 터보(Job Turbo) 계획에 따라 직업 통합 과정을 이수한 난민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지원 제공

6) 구직자·실업자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법

» (교육 및 연구) 2024년 연방정부에서 배정한 연방교육연구부의 관련 예산은 215억유로로 교육 기회의 평등과 학생의 기술개발 전환이라는 목표를 설정

- 2024~2025학년도부터 '기회시작(Startchancen)'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 학생 비율이 높은 약 4,000개 교육대학과 직업학교를 대상으로 10년간 100억유로를 지원
 - 학교를 위한 디지털 협약(Digital Pact for Schools)은 전국적으로 현대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총 65억유로를 투자
- 2024년 연방교육연구부의 예산(Einzelplan 30)은 국가, 유럽 및 국제 프로젝트 보조금을 통해 연구 자금을 지원
 - 신기술 기반 혁신에 약 13억유로, 생명 과학 혁신에 약 6억유로, 연구에 9억유로를 배정하고 지속가능성, 기후 및 에너지 분야, 기초 물리학 연구의 우선순위 분야에 약 5억 유로 투자
- 연방 훈련 지원법(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및 직업교육 지원법(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개정
 - 미니잡(mini-job)⁷⁾한도에 따라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5% 및 본인소득 5%의 수당 인상, 비수혜 대학생들에게 1,000유로 지원, 유연학기제(Flexibilitätssemester)⁸⁾ 도입 등

» (가족 및 사회정책)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 시민들의 기본수요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수당, 부모수당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시행

- 아동에 대한 세금공제와 아동수당(Kindergrundsicherung)을 인상하고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즉시 지원금을 포함한 아동 지원금을 지급
 -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지원금은 1인당 월 42유로에서 292유로로 인상
- 보육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위해 총 54억 유로를 주정부에 할당하고 어린이 보육 품질법(KiTa-Qualitätsgesetz) 수입 분배를 통해 2023~2024년에 40억유로의 추가자금 지원
- 초등학생을 위한 종일 보육법(Ganztagsförderungsgesetz)이 2026년 8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종일 보육 재정 지원법(Ganztagsfinanzilfegesetz)에 따라 35억유로를 지원

» (의료)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의료 시스템의 추가 지출과 수익 부족은 감소했으나 지정학적 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적 영향과 의약품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새로운 추가 부담이 발생

- 에너지 위기로 인한 에너지 비용 증가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병원 및 요양원

7) 미니잡은 월 538유로 이상을 벌 수 없는 한계직 또는 몇 주, 몇 달 동안의 단기 고용직

8) 독일 연방교육진흥법(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15조 3항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 및 훈련비를 한 학기를 초과한 기간 동안 지원하여 학업을 연장하는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조

에 80억 유로에 달하는 경제 안정화 기금 추가 제공

-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화하기 위해 의료 디지털화 가속화법(Gesetz zur Beschleunigung der Digitalisierung des Gesundheitswesens)과 건강 데이터 사용에 관한 법률(Gesundheitsdatennutzungsgesetz) 등을 제정
- 연방보건부는 장기 요양 보험 시스템의 지출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관련된 사항을 2024년 5월말에 발표할 예정

» (안보 및 국제 협력) 독일은 2023년 6월 독일 국가안보전략을 채택했으며, 앞으로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GDP의 2%를 계속해서 국방비에 지출할 예정

- 2024년 예산에서 연방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데 71억 유로를 지출할 예정이며, ODA 지출에는 210억유로를 배정

» (조세) 재정 및 조세 정책을 정상화하고 투자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업을 위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공공 재정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시행

- 연간 32억 유로에 달하는 성장기회법(Growth Opportunities Act)을 통해 조세제도를 단순화하고, 모든 부문에 걸친 투자 및 혁신 조건을 개선
- 혁신적인 기업과 스타트업에게 투자대상으로서의 독일의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미래금융법(Future Financing Act)을 통해 자금조달 조건 개선 및 조세제도 개편
 - 스타트업 및 규모 확장을 위한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이연을 대폭 확대하고 우리사주에 대한 연간 세금 공제를 1,440유로에서 2,000유로로 인상하는 등 우리사주 소유권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조항을 포함
-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요식업 부문의 부가세 감면 조치, 2024년 3월 31일자로 가스 및 난방에 대한 부가세 감면 만료 등 코로나19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행된 한시적 지원 축소
- 2024년 인플레이션 보상법은 총 42억유로 규모의 지원을 통해 물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기본 세액공제액은 인당 11,604유로(아동은 1인당 6,384유로)로 인상
- 독일은 2023년 말 연방법 공보에 글로벌 최저한세(Mindeststeuergesetz)를 공포하였으며 2024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다 EU의 국가별 재정정책 권고 이행

» 독일 연방정부의 경제 및 재정정책 의제와 구호·안정화 조치는 EU 국가별 권고에 부합

- EU 이사회 권고(2023.6.16.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된 지원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중단해야하며 새 지원 조치가 필요한 경우 취약한 가구와 기업을 중심으로 보호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2024년 순지출 증가를 2.5% 이하(구조적 재정수지는 GDP의 0.3% 개선)로 제한하고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저축 필요
 - 공공 투자 계획을 이행하고,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회복기금 및 기타 EU 기금의 유효흡수량을 보장할 것
 -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REPowerEU 정책의 신속한 마무리와 독일의 회복탄력성계획(DARP) 이행의 가속화
 -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디지털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

» 2024년 정부의 순 지출 증가는 국가별 권고 사항에 명시된 최대 수준 2.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조적 재정수지 GDP 대비 0.3% 개선이라는 기준은 달성할 것으로 전망

- 독일은 재정의 회복탄력성에 중점을 두고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정부 적자와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
 - 공공기관 관리 자본금의 수익을 통한 법정 연금 시스템의 자금 조달, 기업연금 강화 및 개인연금제도 개혁 등 장기적인 연금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보호를 위한 목표 설정
- 또한 국가별 권고에 맞게 성장기회법, 미래금융법 등 독일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투자와 혁신을 창출시키는 조세정책을 시행
 - 25세 이하 청년에 대한 기본수당은 최저소득 한도까지 인상되었으며, 월 520~1000유로 소득자에 대한 세금공제는 20%에서 30%로 인상

4 |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 (당면 과제)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독일의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관련주요 문제 중 하나로 노년부양비와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침

- 2020년~2030년대 퇴직 인구의 절댓값과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잠재성장률은 2023년 0.7%에서 2028년 0.5%로 감소할 것

» (장기적 관점의 정부 수입·지출) '2024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이전 보고서에 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며, 노동시장, 연금, 의료 분야에서의 구조적 개혁과 공공 재정의 건전화를 강조

- 노령화 관련 연금, 의료, 장기 요양 등 공공 지출은 향후 10년 동안 매우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2070년까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치)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에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감안한 공급 측면의 재정 및 경제 정책, 연금, 의료 및 장기 요양, 가족 및 교육 정책이 포함

- (생산성 제고) 디지털화, 기록적인 수준의 공공 투자는 공공 인프라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기본 조건을 조성해 민간 투자와 혁신을 촉진
 - 성장기회법, 미래금융법, 관료주의 구제법IV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능력 향상과 성장 잠재력 증가에 기여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 공공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지속 가능한 수익 기반이 필요하며, 과세수준 및 조세구조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투자 및 성장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
 - (노동시장) 2030년대까지 계속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디지털화 및 탈탄소화로 인한 구조적 변화에 따라 숙련된 노동의 공급이 필수적이며, 공공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숙련노동전략(Skilled Labour Strategy)⁹⁾을 수립
 - (연금) 법정 연금 시스템은 세대 간 자본기금을 통해 전문적으로 관리되면서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을 보장하며, 2024년 연방예산에 기금조성을 위한 120억유로 대출이 포함
 - ◆ 2031년까지 퇴직 연령을 67세로 점진적으로 늘려 연금 수령자와 기여금 납부자 간의 세대

9) 전략의 5가지 핵심 우선순위는 (1) 최신 교육 및 훈련, (2)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3) 노동 잠재력 활용 및 노동 참여 증가, (4) 업무의 질 및 직장 문화 개선, (5) 이민 정책의 현대화

간 균형을 유지하고, 2024년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개혁을 추진

- ◆ 2022년 연금조정법 및 빈곤층 혜택 개선법(Gesetz zur Rentenanpassung 2022 und zur Verbesserung von Leistungen für den Erwerbsminderungsrentenbestand)을 통해 추격요소(catch-up factor)를 도입
-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 제도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며 구조개혁은 특히, 지출측면에 초점을 맞춰 시행할 예정
- ◆ 의료 디지털화 가속화법, 건강 데이터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전자의료기록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이면서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 (노동, 가족, 교육 정책) 인구통계학적 추세와 전체 잠재 생산량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 감소 예상을 고려할 때, 이민 등을 통한 숙련 노동자 유입,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교육 및 역량 개발 강화 등이 필수적
- (여성의 취업률 강화) 어머니와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고 여성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보와 지속가능성에 큰 잠재력을 제공
- ◆ 연방정부는 2025년 말까지 전체 연방 행정부 관리직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주(州)의 어린이 보육 확대를 위해 자금 지원
- (이민정책) 숙련된 근로자가 독일로 이주하고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은 기술 부족, 인구 고령화 및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 ◆ 기술이민법(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독일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개정
- (교육)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직업 훈련 및 교육 시스템은 필수적이며, 연방훈련지원법 개정, Startchancen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더 나은 교육 인프라를 제공

»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공공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자 정기적인 지출검토를 통해 수입·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

- 2024년 4월 10일 승인된 11차 지출 검토는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연방예산의 편성 개선 문제에 초점을 맞춰 환경부, 자연보존부, 원자력부 등과 함께 진행
- 연방정부는 환경과 기후에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지출과 보조금을 줄여나가겠다는 목표에 맞춰 향후 몇 년간 모든 보조금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와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를 계속해 나갈 예정